

2025년 학생 대상 인권 현황 조사 결과

I. 조사의 목적

현 설문조사는 2025년 KDI 국제정책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이며, 해당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인권 감수성 현황 및 교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

해당 실태조사를 통하여, 외국인 재학생들이 41.6% (2023년 대학정보공시 기준¹⁾)인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대한민국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의 인권 관련 인식 현황 또한 함께 파악하고, 인권침해 실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인권침해 피해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II. 조사 개요

가. 대상: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박사 재학생 701명 ²⁾ (2025년 10월 기준)

나. 조사 기간: 2025년 10월 01일 ~ 2025년 10월 30까지

다. 응답자 수: 286명 (전년 대비 16명▲ 전년 270)

라. 응답률: 40.8% (286/701³⁾) (전년 대비 0.8%▲)

마. 조사 방법: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

바.

II. 조사 주요 내용 요약

가. 개인 문화권 및 기타 현황(Cultural Region and Status)^f

○ 본 조사는 2025년 10월 한 달간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 7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286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40.8%였다. 전년 대비 응답 인원이 16명 증가하였고, 응답률도 0.8%p 상승하여, 학생들이 인권 관련 담론과 학교 내 인권 환경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 60.5%, 남성 39.5%로 여성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은 30대(45.8%)와 20대(36.4%)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과정은 석사가 95.4%, 박

1) (외국인학생수/전체 재학생 수) (총 외국인 유학생(313명)/전체 재학생(752명))

2) 휴학생 미포함

3) 설문 응답자: 2025년 10월 29일 기준 전체 재학생

사가 4.5%로, 석사과정 재학생의 응답이 절대 다수였다. 문화권별로는 한국 39.1%, 동남아시아 24.1%, 아프리카 21.0%가 큰 비중을 이루어, 다문화·다국적 구성이 뚜렷한 대학원 환경이 반영되었다.

- ☞ 본 조사 결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존하는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문화권 분포에서 대한민국 학생은 39.1%이며, 동남아시아권(24.1%), 아프리카권(21.0%)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제정책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다문화적 특성이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유사한 구성이나, 응답률이 증가하여(270명→286명) 학생 참여도가 향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 인권 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

자가평가에 기반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인권 감수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35점, 성인지 감수성은 4.24점, 국제사회 인권 이슈 관심도는 4.18점으로 모두 '높음' 이상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국제사회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 학생이 국내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국내 3.66점 vs 국외 4.19점), 성인지 및 인권감수성 또한 국외 학생이 소폭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다양한 국가·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이 국제 인권 이슈 및 젠더 이슈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편, 세부 문항을 합산해 산출한 인권 감수성 점수(50점 만점 평균 36.8점)와 성인지 감수성 점수(90점 만점 평균 73.98점)는 전년 대비 각각 소폭 감소하였다. 응답 경향을 보면, '타인의 인권 역시 나의 인권만큼 소중하다'는 문항에는 압도적 다수가 동의한 반면, 사생활 소문, 차별, 피해자 책임 전가, 성적 농담 허용,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원칙적인 인권·성인지 인식'은 높으나, 조직문화·관계 맥락에서의 실제 행동과 태도는 여전히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인권침해의 발생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의 46.9%가 '인권침해에 관한 이해도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어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 차이'(17.1%), '문화별 차이'(12.2%), '낮은 처벌 규정'(9.4%), '평등하지 않은 조직 문화'(8.0%)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학생은 '이해 부족'과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 차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한 반면, 국외 학생은 '이해 부족'과 함께 '문화 차이'와 '낮은 처벌 규정'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인권 침해 현상을 두고도 국내·국외 학생이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인권 감수성 수준은 전체적으로 높은 경향을 유지하였다. 2025년 인권감수성 자가평가 평균은 4.35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하였다. 특히 국적별 비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평균(4.36점)이 내국인 학생(4.16점)에 비해 높아, 외국인 학생이 인권 관련 인식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24년에는 인권감수성이 소폭 감소한 바 있어, 이번 상승은 인권교육 경험 증가 및 교육 접근성 개선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 성인지감수성(Gender Sensitivity)

-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낮은 처벌 규정’(31.1%)과 ‘인권침해에 관한 이해도 부족’(30.4%)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 차이’(12.2%)와 ‘문화별 차이’(11.5%)도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내 학생은 ‘낮은 처벌 규정’과 ‘이해 부족’을, 국외 학생은 ‘이해 부족’과 ‘문화 차이’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제도적 억제력 부족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과 규범, 문화적 기대치의 차이가 실제 갈등과 침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과거 인권교육 경험은 전체의 80.1%가 ‘있다’고 응답하여, 대다수 학생이 입학 전 이미 인권 관련 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방식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경험이 가장 많았고(49.8%), ‘온라인만’(31.0%), ‘오프라인만’(19.2%)이 뒤를 이었다. 교육 참여 계기로는 ‘의무 교육 사항’이라는 응답이 52.3%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과의 연관성’(34.1%), ‘인권에 대한 호기심’(13.1%)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처럼 상당수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68.6%가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보통’까지 포함하면 90% 이상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효과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형식적·의무적 교육이라 하더라도, 내용과 전달 방식이 적절할 경우 학생들의 인권 인식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성인지 감수성 2025년 자가평가 평균은 4.24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외국인 학생(4.24점)이 내국인 학생(4.13점) 대비 높은 인식을 보였다. 이는 문화적 배경과 성 관련 사회규범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년에는 성인지 감수성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번 개선은 의미 있는 변화로 판단된다.

다. 캠퍼스 내 (성)인권침해 경험 실태(Survey of (sexual) human rights violations on campus)

- [캠퍼스 내 전반적 성·인권 관련 환경에 대한 평가]는 30점 만점에 평균 24.0점으

로, 대체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KDI School에서 나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문항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했으며, 인권침해적 문제를 편하게 상의할 수 있는 대상(상담사, 친구, 교수 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반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권침해적 불편감’ 문항에서는 약 15% 수준의 학생이 동의 응답을 하여, 다문화 구성에 따른 문화·종교·성·정치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불편감이 적지 않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 [실제 성·인권 침해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반적으로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이 0.4~3.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두발·복장 간섭 및 강요(3.5%),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질문 및 놀림(3.5%), 폭언·욕설(2.1%), 신체적 폭력·위협(1.0%), 물건 던지기 등 위협적 분위기 조성(1.0%), 스토킹 및 원치 않는 연락(1.7~2.1%) 등 다양한 유형이 보고되었으나,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낮은 편이다. 다만, 각 문항에서 인권침해 행위자는 대체로 ‘학생’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사례에서는 교수·직원에게 의한 침해도 보고되었다. 또, 피해 후 대응 방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알려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 생각해서”,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피해 경험 자체의 빈도는 낮지만,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신고와 보호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한 신뢰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학습권 및 노동권 침해 경험] 역시 전체적으로는 낮은 빈도를 보였다.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충실한 수업을 듣지 못하신 경험, 특정 수업 수강 제한을 경험한 학생은 각각 4명,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보장 미흡과 ‘적절한 진로·학업 상담을 받지 못함’에 응답한 학생은 각각 7명으로 나타났다. 교수 논문 대필, 연구비 부적절 운용 강요, 선물·접대 강요 등 중대한 학문·연구윤리 침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조교 등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의 노동권 침해도 ‘과도한 통제·감시’ 1건 외에는 별다른 보고가 없었다. 그럼에도 일부 학생이 수업 운영과 상담 지원, 비대면 수업의 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만큼, 학습 지원 체계와 교수-학생 간 소통 방식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인권침해 발생 시 예상 대응]을 묻는 문항에서, 60.5%는 인권센터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비율도 19.2%에 달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1%로 소수에 그쳤다.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교육·캠페인·홍보 활동’(46.9%)과 ‘행위자 처벌 강화’(36.0%)가 꼽혔으며, 향후 KDI School이 취해야 할 대응으로는 ‘소규모 상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35.0%), ‘익명성이 보장된 소통창구 활성화’(32.2%), ‘규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29.4%) 등이 고르게 선택되었다. 인권침해 발생 시에는 ‘피해자·행위자 분리조치’(30.8%)와 ‘피해자 회복 지원’(29.0%)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다.
- [인권침해 목격 경험]은 5.9%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주로 차별·무시, 성희

롱·성폭력, 갑질·괴롭힘 등을 목격했다고 보고하였다. 목격 후 행동으로는 ‘피해자를 도와주었다’가 가장 많았으나, 여전히 일부는 보복 우려, 관계 악화 우려, 상황 인지 부족 등을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개인의 인식 수준과 별개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심리적 지지체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 ☞ 캠퍼스 내 (성)인권침해 경험 실태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두발 간섭, 차별·놀림 경험 등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0.4~3.5%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결과로, 실제 인권침해 발생 빈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감 경험 응답이 존재한다는 점은 다문화 환경에서의 잠재적 갈등 요인을 시사한다.
- ☞ 캠퍼스 내 성·인권 환경 평가 점수는 2025년 26.25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23점 감소하였다. 2024년에도 환경 점수가 감소한 바 있어, 긍정적 평가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환경의 체감 수준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방식 변화, 학생 구성 변화, 신고·상담 체계 활용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라. 인권센터에 관하여(About Human Rights Center)

-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89.9%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인권교육(57.6%)과 포스터·안내게시판(23.7%)을 통해 정보를 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4.3%로 높았다.
- [인권센터에 가장 바라는 역할]로는 ‘비밀유지’(37.9%), ‘공정한 조사’(22.5%), ‘피해자 보호(분리조치)’(17.9%), ‘모니터링·재발방지 조치’(12.9%)가 꼽혔다.
- [인권센터 이용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다른 사람이 알까봐”(28.4%), “센터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18.9%),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15.6%),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4.5%)가 제시되었다.
- [학생들이 인권센터에 기대하는 역할]로는 ‘보고·소통 창구 활성화’(49.3%),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제공’(45.5%), ‘피해자 보호조치 제공’(45.1%), ‘성인지·인권 교육 활성화’(38.8%), ‘제도 개선 노력’(32.9%), ‘법률적 도움’(31.1%) 등이 복수 응답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 인권센터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는 인지도 및 이용 의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보호와 익명성 요구가 강화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공식적인 대응체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확보 및 절차적 안정성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 종합요약

- KDI 국제정책대학원 재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인권·성인지 감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교육기관의 인권 환경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문화 차이와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인권침해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영역에서는 차별, 사생활 침해, 언어·신체적 위협, 스토킹 등 구체적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경험 후에도 ‘개선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관계 악화·보복 우려’로 인해 적극적 신고나 공식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인권센터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이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비밀보장과 공정성, 실질적 효과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인권센터가 교육·상담·제도개선·신고 및 보호체계 전반에서 보다 신뢰받는 파트너로 기능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역	전체	내국인	외국인	2024 대비
개인 문화권 및 기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39.1%, 동남아시아 24.1%, 아프리카 21.0% 등 다문화 구성 - 석사 과정 95.4%가 응답 - 여성 비율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의 약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아프리카권 중심으로 높은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학생 비중은 유사 - 응답률 상승(2024: 270명 → 2025: 286명)
인권 감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5점(5점 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폭 상승
성인지 감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4점(5점 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폭 상승
인권침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 비율 전반적으로 낮음: 0.4~3.5% 수준 - 가장 높은 항목: 두발·차별 놀림 경험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인권환경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인지 시 신고 의향이 높음 - 피해자 보호 및 익명성 요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 감소 - 인권센터 인지도 및 교육 경험을 보고 유지

2. 조사 결과의 시사점 (외부전문가 작성)

작성 전 염두 해두실 인권센터의 업무 현황

- 2025년 교육제공 현황
 - 비대면 인권교육(서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입학시 필수 이수
 - 대면 오리엔테이션 (교내 직원을 활용한 자체 집합 교육) 입학 시 2시간 필수 이수(인권,성,장애)
 - 외국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1회(대면 1시간)(외부강사)
 - 학생 대상 소규모 인권교육 연 4회 제공 (4.3, 6.23, 7.21 제공)
 - 재학생 대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서약서 제출
 - 카드 뉴스 등 안내 "<https://www.kdischool.ac.kr/board.es?mid=a10503020500&bid=0025>"
 - Report page: "<https://www.kdischool.ac.kr/menu.es?mid=a10503020600>"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QR코드 신고 안내 부착
- ### 작성시 포함되었으면 하는 부분
- 가능하다면 국내 학생 외국인 학생들의 비교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 개별 사례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개선사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인권침해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 사항 등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국인 - 외국인 비교 심층 해석

- 조사 결과, 외국인 학생은 전반적으로 내국인 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성인지 감수성과 국제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외국인 학생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4.36점으로 내국인 학생의 4.1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적 인권 담론에 대한 관심도 역시 외국인 학생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의 사회적 규범 경험, 기존 교육 경험, 국제 대학 환경 적응 과정에서의 인권감수성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 반면 내국인 학생은 인권침해의 원인을 개인의 이해 부족과 친밀감 표현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사생활 질문이나 외모 언급 등 관계 중심적 문화 특성에 기반한 행동이 인권침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조사에서 확인된 사생활 침해 유형 사례가 주로 내국인 학생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경향과 일치한다. 특히 “관계 형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는 문화적 해석과 “사적 영역 침해”라는 인권적 해석 사이의 간극이 내국인 학생의 인식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학생은 학내 인권환경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감 경험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 장벽, 사회적 규범 차이, 종교적·문화적 기대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갈등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과 보호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은 외국인 학생들이 피해 발생 시 대응에 취약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내·외국인 학생 모두에서 신고 이후의 보호조치와 절차 안내 부족이 신고 회피의 핵심 이유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학생은 제도적 보호의 실효성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갖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내국인 학생은 관계 악화 우려 및 공동체 내 인간관계 유지에 대한 부담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이러한 비교 결과는 향후 인권센터의 예방 및 대응 정책 수립에 있어 집단별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는 경계 설정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성인지 교육 강화가 요구되며,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는 신고 절차 안내, 권리 보장 정보 제공, 다국어 기반 접근성 개선 등이 우선 과제로 제시된다. 동시에 사례 기반 예방교육과 분리조치·보호 동행 등 피해자 보호 중심 접근은 두 집단 모두에게 신뢰 형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로 판단된다.
- 종합적으로, 외국인 학생의 높은 감수성과 인권 인식은 인권센터의 교육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내국인 학생의 인식 개선은 학내
- 인권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예방 계획은 집단별 특성과 인식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포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영역	국내 학생	외국인 학생	주요 차이 해석
인권감수성(평균)	4.16	4.36	외국인이 전반적 인권 감수성 더 높음
성인지 감수성(평균)	4.13	4.24	성인지 인식에서도 외국인이 더 높은 수준
국제 인권 이슈 관심도	3.50	4.33	외국인의 국제 인권 이슈 관심도 높음
캠퍼스 인권환경 평가(30점)	23.64점	24.24점	외국인이 학내 인권환경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
과거 인권교육 경험 비율	34.6%	45.5%	외국인의 인권교육 경험이 더 많음
인권침해 원인 인식	이해도 부족(14.1%)문화 이해 차이(12.6%)평등하지 않은 조직문화(6.7%)	이해도 부족(26.3%)낮은 처벌 규정(7.0%)문화 차이(7.0%)	외국인은 제도적 보호 부족을 더 크게 인식
문화적 불편감 경험	낮음	더 높음	외국인에서 문화 갈등 경험이 두드러짐
성·인권 침해 존재 인식	낮음	다소 높음	외국인이 피해 가능성 및 존재 여부를 더 민감하게 인식
신고 회피 이유	관계 악화 우려, 공동체 부담	절차 이해 부족, 보호 신뢰 불확실	내국인은 관계 중심, 외국인은 제도 신뢰 기반
교육 경험	필수교육 중심	기존 교육 경험 + 외국인 대상 교육	외국인의 예방교육 경험 폭이 넓음
지원 요구	경계 설정·인행 기준 명확화	절차 안내·다국어 정보 제공	집단별 맞춤 지원 필요

개별사례	개선조치
<p>1) 사생활 침해 및 사적 질문 사례</p> <p>☞ 개인 배경·가정사·종교·연애 관련 질문, 외모 언급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및 소규모 교육에 경계 설정(boundary setting) 교육 포함 - 국내 학생 대상 “친밀감 표현과 인권 침해의 경계” 사례 중심 교육 강화 - 교내 직원·조교 대상 의무 교육 포함(학생지원 상황에서 사생활 질문 금지 명문화) → 특히 내국인 학생에서 해당 사례 빈도가 높아, 문화적 친밀감 표현과 인권 감수성 간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p>2) 차별적 언행 및 조롱 사례</p> <p>☞ 두발·복장 언급, 역양·발음 조롱, 문화적 배경 비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정례화(외국인 학생 대상이 아닌 내국인 대상 강조) - 실제 사례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 외국인 학생 의견 반영 창구 운영 → 외국인 학생들이 문화적 차이를 더 민감하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해당 영역이 갈등의 주요 잠재요인으로 파악됨
<p>3) 원치 않는 연락·스토킹 우려 사례</p> <p>☞ 연락 강요, 반복적 메시지, 개인시간 침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즉시 분리조치 기본 적용 - 피해자 보호 동행제도(센터 staff 또는 외부기관) 운영 - “원치 않는 연락 대응 매뉴얼” 독립 항목 신설 - 피해자 익명 상담 연계 강화 → 학생 간 관계 특성상 은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개입의 시의성이 중요함
<p>4) 위협적 분위기 조성 사례</p> <p>☞ 고성, 위협적 행동, 물건 던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경고 및 행동시정 지침 마련 - 재발 시 공식 조사 전환 및 외부 전문기관 연계 - 안전 확보를 위한 공간 분리 조치 의무화 → 발생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는 높아, 명확한 대응 기준 필요
<p>5) 신고 이후 보호 미흡 인식 사례</p> <p>☞ “조치가 없었다”, “알려도 변화가 없다”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이후 진행 단계 안내 의무화(접수-조사-조치-사후지원 단계 별 통보) - 피해자 보호조치 적용률 관리 지표화 - 처리기간 기준 설정(예: 14일 이내 1차 조치) → 조사 결과 가장 신뢰 저하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파악됨

나. 개별 사례 기반 개선사항

- 2025년 조사에서 보고된 개별 인권침해 사례들은 전반적으로 발생 비율은 낮았으나, 사생활 침해, 차별적 언행, 위협적 분위기 조성, 스토킹 및 원치 않는 연락 등 일부 유형은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경험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알려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식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고되어, 신고 이후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신뢰 확보가 시급한 개선 과제로 도출된다.
- 개별 사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 결과요약 및 결과 기반 예측되는 리스크 요인

- 2025년 조사 결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재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인권·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학생이 내국인 학생보다 높은 감수성을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 구성원 비율이 높은 교육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된 인권 인식이 캠퍼스 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그러나 학내 인권환경 평가는 30점 만점 중 26.25점으로 전년 대비 1.23점 감소하여 체감 환경의 악화가 확인되었다. 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감 경험 응답이 보고되어 다문화 학습 환경에서의 잠재적 갈등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 침해 발생 빈도 자체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체감하는 보호 체계와 지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또한 일부 사례에서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분리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효적으로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확인되었다. 전년 자문에서도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신뢰도 제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스크 유형	발생 가능성	영향도	종합 위험도	우선 대응
피해자 보호 미흡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즉시 보호조치, 프로토콜 강화
신고·상담 이용 저조	높음	중간	높음	홍보·접근성 개선
문화적 갈등	중간	높음	높음	다문화 교육, 중재 체계
익명 신고 남용	중간	중간	중간	검증 절차, 단계별 조사
행정 처리 지연	중간	높음	높음	처리 기준 명확화
외국인 학생 소외감	중간	높음	높음	다국어 지원, 맞춤 지원
교육 효과 저하	높음	중간	높음	참여 확대 전략

다. 2025년 인권침해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사항

- 2025년 조사 결과와 인권센터의 현행 운영 체계, 교육 제공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필수 온라인 교육, 입학 시 대면 오리엔테이션, 외국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소규모 인권교육 제공, 인권서약서 제출 제도, 카드뉴스·QR 신고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이 시행되고 있으나, 체감 인권환경 점수의 감소, 신고 회피 경향, 내국인·외국인 간 인식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1) 내국인 대상 성인지·문화 다양성 교육 강화

- 조사 결과 외국인 학생이 내국인 학생에 비해 인권·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문화적 차이 관련 불편 경험은 외국인 학생에게 더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 친밀감 표현과 인권침해의 경계 교육
 - 사생활 질문·외모 언급 금지 사례 교육

- 역할극·사례 기반 학습 제공
- 교수·조교·행정 직원 포함 의무 교육
- ☞ 내부 구성원의 언행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파악된 만큼, 내국인 대상 교육 확대는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신고 이후 보호조치 강화 및 절차 표준화

- 일부 사례에서 신고 후 “변화 없음”, “보호 미흡” 인식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고 회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방 계획에는 다음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신고 즉시 분리조치 의무 적용
 - 피해자 동행 지원제도 도입
 - 외부 전문기관·법률 지원 연계 체계 구축
 - 신고-조사-조치-사후지원 단계별 안내 의무화
 - 처리기간 기준 설정(예: 14일 이내 1차 조치)
- ☞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는 신뢰도 제고의 핵심 요소이다.

3) 다국어 기반 지원 및 외국인 학생 접근성 강화

- 외국인 학생은 신고 절차 이해 부족,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피해 대응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제공 중인 외국인 대상 교육 1회 및 안내자료 외에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 신고·상담 안내 다국어 확대
 - Report page 및 QR 신고 페이지 다국어 전환
 - 외국인 학생 의견 반영 창구 정례화
 - 문화적 차이 기반 갈등 예방 프로그램 운영
- ☞ 외국인 학생의 체감 환경 개선과 실질적 접근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4) 사례 기반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정례화

- 현재 제공 중인 소규모 교육(연 4회)은 긍정적이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이 필요하다.
 - 조사 사례 기반 콘텐츠 제작
 - 역할극·시나리오 기반 체험형 교육
 - 피해자 관점 경험 프로그램
 - 연간 정례 운영 계획 수립
- ☞ 실 사례 적용형 교육은 인식 변화에 효과적이다.

5) 신고·상담 시스템 이용 활성화 전략

- QR코드 안내 및 Report page 운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

된다. 활성화를 위해 다음 전략이 요구된다.

- 24시간 온라인 익명 상담 채널 운영
- 신고 후 담당자 배정 및 결과 안내 강화
- 이용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개선
- 홍보 전략 강화(OT, LMS, 이메일, SNS, 게시물)
- ☞ 이용 경험 개선은 신고율 및 조기 개입에 직접 연결된다.

6) 인권센터 신뢰도 제고를 위한 행정 체계 개선

○ 조사 결과, 사건 대응에 대한 신뢰 부족이 체감 환경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처리 절차 명확화 및 매뉴얼 업데이트
- 담당자 지정 및 공지
- 처리 단계별 정보 제공
- 평가·모니터링 체계 구축

7) 평가 지표 기반 예방 계획 운영

- 2025년 예방 계획은 단순 활동 나열이 아닌 성과 기반 접근이 필요하며, 다음 지표 설정이 권고된다.
- 인권교육 참여율
- 교육 효과성(사전-사후 평가)
- 신고·상담 이용률
- 보호조치 적용률
- 외국인 학생 만족도
- 인권환경 체감 점수 변화

8) 종합 권고

○ 2025년 인권침해 예방 계획은 다음 방향성을 중심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 내국인 대상 맞춤형 감수성 교육 강화
- 피해자 중심 보호조치의 표준화 및 즉시성 확보
- 외국인 학생 접근성 및 다국어 지원 확대
- 사례 기반 예방 콘텐츠 개발·정례화
- 신고·상담 시스템 신뢰 구축 및 활성화
- 행정 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
- 성과지표 기반 운영 및 지속적 평가
- ☞ 이러한 전략은 인권센터의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학내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향후 대학의 인권 정책 운영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고사항	실행 로드맵 과제	주요 활동	성과지표	담당
1) 내국인 대상 성인지·문화 다양성 교육 강화	상시 인권교육 운영	월 1회 사례 기반 워크숍, 역할극	참여율 60% ↑, 만족도 4.5 ↑	인권센터
	오리엔테이션 교육 강화	경계 설정·사생활 준중 교육 포함	신입생 교육 이수율 100%	인권센터/교무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내국인 대상 문화 다양성 교육	문화 갈등 응답 감소	국제학생지원
2) 신고 이후 보호조치 강화 및 절차 표준화	피해자 보호 프로토콜 재정비	즉시 분리조치, 보호 동행제	보호조치 적용률 100%	인권센터
	사건 처리 매뉴얼 개정	처리 기준 명확화(14일 이내 1차 조치)	처리기간 준수율	행정실
3) 다국어 기반 지원 및 접근성 강화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	신고 절차·권리 안내 번역	외국인 만족도 상승	국제학생지원
	신고·상담 페이지 다국어화	QR 신고페이지 다국어 지원	신고 이용률 상승	정보전산
4) 사례 기반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정례화	교육 콘텐츠 개발	실제 사례 기반 콘텐츠 제작	교육 효과성 향상	인권센터
	소규모 교육 정례 운영	연 4회 제공 → 정례화	참여율 증가	인권센터
5) 신고·상담 시스템 이용 활성화	익명 상담 채널 운영	24시간 온라인 상담	상담 이용률 증가	상담센터
	홍보 강화	OT·LMS·게시판·SNS 안내	신고 접근성 향상	인권센터
6) 행정 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	사건 대응 프로세스 표준화	단계별 안내 시스템 구축	신뢰도 향상	인권센터
7) 성과지표 기반 운영	모니터링·평가	참여율·신고율·환경점 수 관리	연차 평가 반영	인권센터

다. 시사점

-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계획과의 연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 인권교육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교육 경험 대비 인식 향상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어, 향후 계획에서 제시된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교육 확대 등은 교육 효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향후 계획에서 제시된 피해자 적극 보호조치, 보복 방지 대응 마련은 신고 이후 보호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다.
- 셋째, 상담 및 소통 창구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상담 접근성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향후 계획에서 온라인 상담 안내 강화 및 소통창구 개선이 포함된 점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 넷째, 행정 절차 개선과 매뉴얼 업데이트는 인권센터 대응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보인다. 신고 절차의 명확화와 신속한 처리 체계 구축은 향후 계획에서 제시된 절차 개선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적으로, 본 조사 결과는 인권센터가 향후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공한다: ① 교육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②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 구축, ③ 소통 및 상담 지원체계 개선, ④ 행정 절차의 체계화 및 신뢰도 제고.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인권환경 체감 수준 향상과 구성원 간 문화적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결국, 이번 조사는 인권센터가 ‘사건 처리 기관’을 넘어, 구성원과 함께 캠퍼스 문화를 형성하는 동반자적 기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